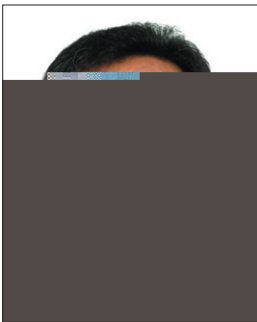


이달의 이슈 _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시장지향형 지역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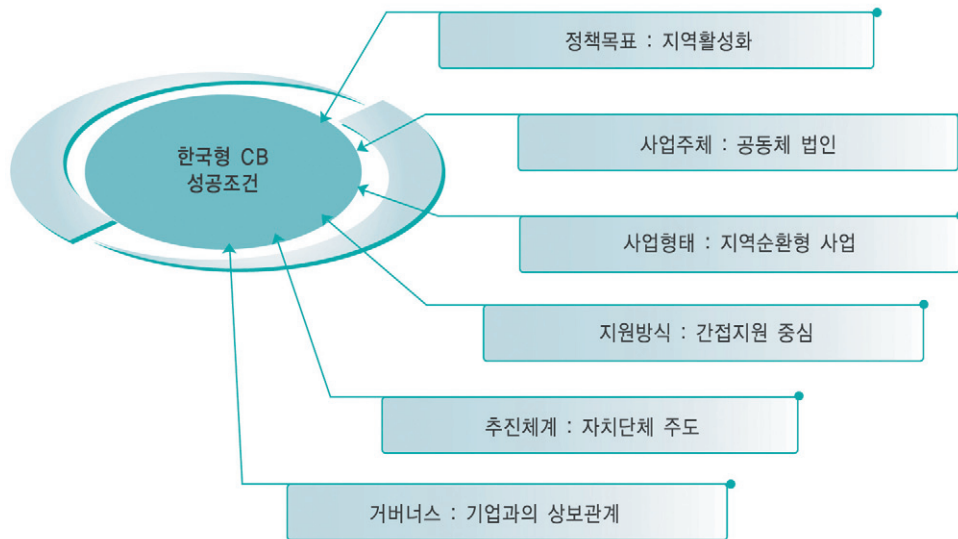
Business)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선진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NGO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출발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육성해 왔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시책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하고 유사 정책 간에도 차별화가 부족한 채, 각 부처별로 제각기 부처의 미션에 맞추어 사업이 분산·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자립기반도 미흡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의 상황에서 그간의 진행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적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개념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서 사회성(공공성), 영리성(사업성), 지역성을 함께 가진 활동을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이 제각기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선도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의 나름 활발한 활동에 비해 아직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추진주체별 인식이 서로 다른 채 정책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무리한 정책확산으로 재정지원에 의존한 부실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역사적 전통,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각, 고용정책의 특성, 커뮤니티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특징적 모델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정책경험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의 바람직한 조건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로부터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지향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되 가급적 법인격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법인격 취득의 장애 때문에 창업 및 사업 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고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밀착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사업이 구성하여 자원, 인력, 판매 및 서비스 수요 등을 지역내에서 조달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사업비 직접지원방식의 정부보조를 점차 경영지원과 시장 확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나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규모나 능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지나친 개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율성, 자립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타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해쳐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 및 간접지원을 지향하되, 중앙정부는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에 역할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기업으로부터 경영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지원받고,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 공헌의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상생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정착할 수 있는 협력과 봉사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